

한 눈으로 보는 건강권 뉴스

Right to Health News at a Glance

2014년 2월 1주차 (2014.2.3. ~ 2.5)

요약(Summary)

1. 3대 비급여 관련

- (1) 오는 11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3대 비급여 제도 개선안 제시 예정(2/5)
- (2) 병원 4인실도 건강보험 적용하고 병실료 인상 가닥(2/5)

2. '보건의료' 뜨거운 감자...2월 국회 관심집중(2/4)

3. 황우여 “의료계, 국회서 원격의료·영리자법인 등 개선방안 찾자”(2/4)

○ 기타뉴스

- 정부, 종합병원 부지 내 의료관광호텔 허용 추진(2/3)
- 불면증·우울증 등 정신질환도 실손보험 보상(2/5)
- 의정협의회,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운영 합의(2/5)
- 다국적 제약사들, 시장형 실거래가 법 위반 소지 주장(2/5)
- 여의도연구소 여론조사에서 68.3%가 "원격의료 허용에 찬성"(2/2)
- 금융소비자연맹, “카드사 개인정보보다 보험사 질병정보 유출이 더 위험”(1/22)

1. 3대 비급여 관련

(1) 오는 11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3대 비급여 제도 개선안 제시 예정(2/5)

보건복지부 주요 정책과제인 3대 비급여 제도 개선안이 오는 11일 박근혜 대통령 업무보고를 기점으로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연이어 3대 비급여 관련 보도가 이어지는 데다 지난해 말로 예고한 개선안 발표를 지키지 못한 부담감이 적지 않다.

복지부의 대통령 업무보고는 3대 비급여와 함께 원격의료의 최우선 과제로 제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는 실국별로 보고현안을 검토 중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3대 비급여 개편안은 선택진료 의사 비율을 50% 또는 30%로 축소하고, 상급병실인 4인실까지 건강보험 급여권으로 편입하는 것이 골자다. 앞서 3대 비급여 개선안 논의기구인 국민행복의료기획단이 제시한 내용을 대거 수용한 결과다.

복지부의 3대 비급여 개선은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에 의존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손실분을 보전해준다는 원칙에 따라 최종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3대 비급여로 인해 발생할 병원계의 손실분을 보전해주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럼에도 3대 비급여에 대한 병원계의 우려는 여전하다. 3대 비급여가 개편되면 어떤 식으로든 병원 경영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가 지속되는 모습이다. 더 구체적인 손실 보전방안을 마련해달라는 주문이다. 이런 가운데 복지부는 주요 간부진은 오는 6일 병협을 방문해 3대 비급여에 관해 설명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늦어도 이달 안으로 제도 개선안을 발표할 것이 유력한 상황이다. 대통령 업무보고를 앞둔 시점에서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¹⁾

(2) 병원 4인실도 건강보험 적용하고 병실료 인상 가닥(2/5)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근 상급병실료와 선택진료비 등 3대 비급여로 인해 발생할 병원계 손실을 최대한 줄이겠다고 언급해 그 구체적인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복지부는 기본 개선방안을 마련해 병원계와 협의 중이며, 늦어도 이달까지는 3대 비급여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3대 비급여에 대해 환자 부담을 줄이도록 하는 대신, 손실분은 여러 급여수가를 신설하고 기존 항목에 수가를 가산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30일 정부, 병원계 등에 따르면 6인실 이하 일반병상의 기본입원료를 인상하고, 5~4인실 급여수가 신설 및 특수병상 수가 현실화와 같은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동시에 기존 병실이 현재 6인실에서 4인실로 바꾸고, 상급종합병원에서는 추가 병실료를 물지 않는 일반 병실이 전체 병실 수의 70%까지 확대시키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에 따라 6인 이하 일반병상은 의료기관 종별로 한자릿수 수가 인상을, 5~4인실 급여수가는 두자릿수 신설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무균치료실과 중환자실 등 특수병실에 대해서도 수가를 대폭 올려주는 쪽으로 정책적 검토가 이뤄지는 중이다. 이 같은 방안이 확정되면 6인실보다는 5~4인실로 환자쏠림 현상이 우려되는 만큼 일정 비율로 기준병실 확보를 명시토록 할 전망이다.

선택진료비(특진)도 다양한 항목의 수가 인상으로 손실분을 보존해주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선택진료 신청 대상이 되는 의사 수를 현재 전체 의사의 80%에서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50%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수가인상 폭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선택진료비가 상급종합병원에 몰린 배경을 고려해 중증환자에 관한 수가를 인상하거나 감염 등 환자 안전관리 등을 보상하는 방식이다. 우수 의료기관에 대한 기관별 수가를 신설하거나 의사 경력 등을 고려한 가산수가 신설 등도 검토할 수 있다.

입원환자의 가장 큰 부담으로 지목되고 있는 간병비에 대해선 재원 부담이 커 장기 과제로 밀어 두기로 했다.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등을 위해선 간호사·간호조무사가 대거 필요해 향후 5년 정도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간병비 해결에 나설 방침이다.²⁾

2. '보건의료' 뜨거운 감자...2월 국회 관심집중(2/4)

국회가 3일 오후 본회의를 시작으로, 2월 임시국회 일정을 공식적으로 시작했다.

2월 국회에서는 원격의료와 영리자회사 설립 등 정부가 내놓은 의료서비스 규제완화책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전망이다. 이 밖에 의료행위방해방지법 등 의료계 현안법안의 처리 여부도 관심사다.

2월 임시국회는 오는 28일까지 한 달 간 열린다. 일단 4일과 5일에는 교섭단체대표 연설이, 6일부터 12일까지는 정치·교육·사회·문화 등 각 분야별 대정부 질문이 실시된다. 각 상임위원회별 법안 심의도 재개되며 17일과 20일·27일 본회의를 열어, 심의 법안들을 처리한다.

특히 2월 국회에서는 '보건의료' 분야가 핵심이슈로 주목받고 있다. 원격의료와 의료법인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 등 정부가 내놓은 의료서비스 규제완화책을 놓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예고하고 있는 것.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여야가 맞붙을 격전지다.

야당은 이르면 금주 중 늦어도 내주 초 있을 보건복지부의 국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의료영리화 논란을 짚고 넘어가겠다고 단단히 버리고 있다. 원격의료와 영리자회사 설립 등이 가져올 피해를 국민들에게 명명백백히 알려나가는 자리로 삼겠다고 입장이다. 반대로 여당은 정부에 해명기회를 주어, 의료영리화 논란에 대한 국민들의 오해를 풀어나가는 자리로 만들어가겠다고 각오를 다지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도 주목을 받고 있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의료영리화 논란의 단초를 제공했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정부안)'을 심의하는 주무 위원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정부가 기대를 걸고 있는 대표적인 일자리 창출법안 중 하나이나, 법률에 따라 집중 육성해야 할 산업에 의료서비스를 포함할 것인지를 두고 여야간 이견이 엇갈리고 있다. 여당은 경제활성화를 위해 해당 법안을 2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입장이나, 야당은 의료서비스를 산업적 측면에서 육성하겠다고 의도를 담은 대표적인 의료산업화 법안이라며 '심의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³⁾

3. 황우여 “의료계, 국회서 원격의료·영리자법인 등 개선방안 찾자”(2/4)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원격의료 허용과 정부의 투자활성화 대책을 놓고 야당과 의료계가 국회에서 함께 논의해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자고 제안했다. 황우여 대표는 4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이 같이 말했다.

- "원격의료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장애인, 도서·벽지 거주자 등 병원 다니기 힘든 분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장기간 진료가 필요한 만성질환자들이 의사를 자주 만나게 해드리자는 취지"
- "투자활성화 대책은 경영이 어려운 중소병원에게 기회를 주자는 것입니다. 의료법인의 자법인을 허용해도 병원의 진료는 현재와 다름이 없다"
- "새로운 첨단 의료기기 개발, 해외환자 유치, 해외의료 진출 등으로 부대사업을 확대하는 것", "의료서비스 개선정책은 과거 정부에서도 계속 추진했던 과제로서 영리병원과 전혀 무관하다"
- "의료비가 크게 오르는 일은 없으며, 건강보험 훼손과 같은 의료의 공공성은 약화되지 않는다"
- "국회에서 여야가 의료계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만드는데 힘을 모아야한다"⁴⁾

국내 정책

1. 정부, 종합병원 부지 내 의료관광호텔 허용 추진(2/3)

정부가 의료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해 종합병원 부지 안에 의료관광객을 위한 숙박시설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3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2차 관광진흥확대회의'를 열고 국내 관광 활성화 및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28건의 제도개선 과제를 포함한 총 61개 추진과제를 확정했다.

정부는 의료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해 올 상반기 중 종합의료시설의 부대시설로 부지내 숙박시설 입지를 허용할 방침이다. 다만, 숙박시설의 설치면적은 병상면적의 50% 이하로 제한된다.

지금은 도시계획시설의 일종인 종합의료시설로 결정된 종합병원 부지내 의료관광호텔 설립이 불가하지만 상반기 중 '도시·군계획시설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종합병원들이 관광호텔 건립 자금을 보다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관광진흥개발기금에서 대출기간 7년짜리 시설자금을 대출해주기로 했다.⁵⁾

2. 불면증·우울증 등 정신질환도 실손보험 보상(2/5)

실손의료보험 보상 대상에 불면증, 우울증 등 정신질환 중 일부분이 포함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정신질환의 실손의료보험 보상 제한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현재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상 일시적 불안, 불면증, 경증 우울증 등 정신질환은 보상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가벼운 치료로 완치될 수 있는 정신질환을 보상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한 것이다.

금융위는 학계, 소비자단체, 의료단체, 보험협회 등 관계자들간 의견 수렴을 거쳐 올해 안에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 등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⁶⁾

의료 산업

1. 의정협의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운영 합의(2/5)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원격의료 등 핵심 현안과 장기적 과제를 동시에 논의하기 위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운영키로 중지를 모았다. 이 위원회는 의료발전협의회가 대원칙 및 방향에 대한 합의에 도달한 후, 각 이해 관계자가 참여하는 논의 체계로 꾸려질 전망이다. 구체적 논의를 위해 가입자단체, 타 이해 관계자 등이 포함된 논의 역시 염두에 두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만한 대목이다.

의협과 복지부는 4일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제2차 회의를 갖고 "원격의료, 투자활성화 방안 등 현안 및 단기과제 구체화와 거시 과제 논의를 위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운영의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이날 모임에서 양측은 협의회의 논의가 국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이용에 대한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방향에서 진행돼야 한다는 대원칙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원격의료와 의료법인 자회사 허용, 건강보험제도 개선, 전공의 처우 개선 문제 등 대립 중인 현안을 포함, 각 의제들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의협은 이날 핵심 현안인 원격의료, 투자활성화 방안을 포함해 의료제도 및 건강보험 제도 개선의 중요성을 재차 역설했다.

실무협의를 통해 조금씩 진전을 보이고 있다는 판단 아래 의협은 이날 재차 중요성을 환기시킨 의제 즉, 원격의료, 투자활성화 방안 등은 물론 중장기 과제와 입법관련 과제 등도 지속적으로 협상 테이블에 올리기로 했다. 복지부도 국민 의료이용 접근성 개선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원격의료 및 투자활성화 대책 등의 취지를 거듭 설명하며 설득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큰 틀에서 시각차를 드러냈던 ▲건강보험 수가 체계 불균형 ▲건강보험 의사결정 구조 ▲의료 전문성 존중을 위한 방안 등도 최대한 진정성을 가지고 협의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⁷⁾

<의협이 제시한 의료제도 바로세우기 4개 분야 16개 과제>

- ① 의료현안 분야: ▲원격의료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 등 보건의료서비스 산업 규제 완화
- ② 의료정책 개선안: ▲전문성 강화를 위한 상설 의정협의체 구성(의료제도 변경시 의협과 사전 협의 및 시범사업 진행 등 논의)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과 의료전달체계 개선 ▲의료정보 보호 ▲전공의 수련제도 개선안(유급제도 철회 및 병원측 처벌규정 마련, 병원 신입평가 업무 의협으로 이관) ▲의료관련 법령 개선을 위한 의정 공동 대처
- ③ 건강보험 제도개선 분야: ▲수가 결정 구조 개선 ▲건정심 구조 개선 ▲기본 진료 중심의 급여체계 개선 ▲환자 중심의 의료제공을 위한 심사규제 개선(심사기준 투명화와 환자 선택권 보장)
- ④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적정화 과제: ▲의사 인력 수급(의과대학 정원, 전공의 수련제도, 근로 조건 등) ▲의료 제공(외래 진료, 재원 일수, 평균 진료 환자 수 등) ▲건강보험재정(적정부담, 적정수가, 적정보장 등) ▲의료기관 운영지원 및 통제 ▲의약분업 재평가

약계 뉴스

1. 다국적 제약사들, 시장형 실거래가 법 위반 소지 주장(2/5)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는 5일 시장형실거래가가 공정거래법에 위반될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을 발표했다.

시장형실거래가는 제약사로부터 병원이 약을 정해진 상한가보다 싸게 구입할 경우 차액의 70%를 합법적 인센티브로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로, 2010년 도입된 후 2012년부터 2년간 잠시 중단됐다가 이달부터 다시 시행됐다.

KRPIA는 법무법인 율촌을 통해 법률 자문을 받은 결과 시장형 실거래가가 ‘거래상지위남용 행위’ 및 ‘부당한 거래거절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위법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협회는 “제도 시행 후 의료기관이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할인폭을 정해 그 가격수준에 공급할 것을 요구하는 등의 행위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제약회사에게 불리한 거래조건을 사실상 강요한다는 것으로 ‘거래상지위남용행위’ 중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제약사가 병원의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해당 의약품의 원내 코드를 삭제하는 것은 ‘부당한 거래거절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게 KRPIA 측의 설명이다. KRPIA는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고 덧붙였다.⁸⁾

1. 여의도연구소 여론조사에서 68.3%가 "원격의료 허용에 찬성"(2/2)

2일 새누리당의 자체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원격의료 도입에 성인 10명 중 7명꼴로 찬성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가 지난달 25일 전국의 유권자 2천403명을 대상으로 '보건의료제도 개선책'에 대해 여론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68.3%가 "원격의료 허용에 찬성한다"는 답변을 했다. 응답자의 24.8%는 반대 의사를 밝혔고, 6.9%는 "잘 모른다"고 답했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또 다른 쟁점인 '의료법인 자법인 설립 및 인수·합병 허용'에 대해서는 찬성이 45.3%로 반대 39.0%보다 많았다.

'법인약국 허용'에 대한 찬성률도 63.2%로 반대율 27.5%를 크게 웃돌았다.

새누리당은 의료계와 야권의 반발 속에 정부의 '의료서비스 개선대책'을 둘러싼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 한껏 의미를 부여하는 모습이다. 이에 따라 의료규제 완화와 건강보험 체계 개선을 위해 '당 국민건강특별위원회'를 발족한 데 이어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정책은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목적"이라는 논리를 전파하는 데 더욱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여론조사는 유·무선 임의전화걸기(RDD)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신뢰도 95%에 표본오차 ±2.0%포인트다.⁹⁾

2. 금융소비자연맹, "카드사 개인정보보다 보험사 질병정보 유출이 더 위험"(1/22)

주요 카드사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금융정보와 함께 보험사들이 불법적으로 수집하는 개인 질병정보 유출이 더 위험하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카드사 개인정보유출 보다 더 위험하고 유출가능성이 높은 것이 보험사들이 불법적으로 수집하는 개인의 질병정보라고 22일 주장했다. 연맹에 따르면 생명보험협회는 보험사로부터 개인의 질병정보를 본인 동의를 받지 않고 넘겨받아 10억건 이상을 수집, 이를 다른 보험사에게 불법으로 제공해 보험금지급 심사자료 등 마케팅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현재 개인 질병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도 '민감정보'로 특별히 관리하도록 돼 있다. 연맹은 "만일 이정보가 유출되면 카드사의 금융정보와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국가, 사회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정보임에도 이익단체가 함부로 수집 유통시키고 있다"며 "보험사들은 지난 2011년 제주도 해상에서 추락한 아시아나항공 화물기 기장의 보험가입사실을 사전에 불법으로 언론에 유포해 유족들에게 커다란 상처를 줘 징계를 받은 적이 있다"고 밝혔다.

보험사의 개인 질병정보 수집이 의료민영화와 무관치 않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연맹은 "일각에서는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를 거느리고 있는 삼성그룹이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면서 양 협회에 질병정보를 수집관리시키는 것은 삼성이 추진하는 '의료민영화'에 대비한 포석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라고 주장했다.¹⁰⁾